

#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그 영향요인\*

##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Local Community

우 양 호\*\* · 안 미 정\*\*\*

Woo, Yang Ho · An, Mi Jeong

### ■ 목 차 ■

- I. 서론
- II.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이론적 요인들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과 논의
- V. 결론 및 시사점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지난 10년 동안 수치상으로는 약 50% 이상이 늘어났다. 최근 우리나라 전국 각 지역의 거주외국인은 약 180만 명 이상이며, 이 중에서 다문화 가족은 약 9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전략적 대안과 원인에 대한 고민은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의 주제는 현 단계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의 적응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과연 현실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한지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논의되는 변수는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언급된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망라되었다. 그것은 다문화 가족 내부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커뮤니케이션 특성, 심리적 특성에 관한 요인들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제도적 특성, 지방정부 특성, 지역환경적 특성에 관한 범주로 분류가 되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전국 대도시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3064855).

\*\*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HK) 부교수(제1저자)

\*\*\*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HK) 연구교수(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6. 2. 24, 심사기간(1, 2차): 2016. 2. 24~2016. 6. 9, 게재확정일: 2016. 6. 9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표본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정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지원과 실천적 도움, 그리고 이민자 정착정책의 실제적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 주제어: 다문화 가족, 지역사회, 적응, 영향요인, 이민자 정책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n society have increased rapidly during 2006~2015. According to government figure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familie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belonged to the lowest income bracket and had trouble adjusting to living in local community. So, this study focuses on public policy and the dilemmas faced by the governments of increasingly diverse societi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haracteristics, determining factors and recommendations for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local community. The hypothesis and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was that the features of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local community were mainly determined by many factors, such as demographic factors, communication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governmental factors, local environmental factors. In conclusion,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largely derived from this results which may improve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local community for successful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 Keywords: multicultural families, local community, adjustment, influencing factors, immigrant settlement policy.

##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현 단계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의 적응수준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한지를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있다. 이미 2015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전체 인구의 3.7% 수준인 약 180만 여명(불법체류 포함)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정착한 다문화 가족은 공식적으로 약 30만 가구, 인구수로는 약 90만 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국 227개 시·군·구의 20%가 넘는 49곳에서 외국인이 1

만 명 이상씩 살아가고 있으며, 국제결혼 등으로 매년 3만 가구 내외의 다문화 가족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향후 2020년 즈음에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대략 300만 명, 다문화 가족은 약 1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지방의 농·어촌보다 도시지역,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평가된다(법무부, 2015; 행정자치부, 2015b).

이렇듯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이제 정부발표나 언론보도의 수치만으로 따진다면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완전히 접어들었음을 부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그런 이유로 근래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다. 즉 국제결혼과 노동이주 등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족의 급증은 그 짧은 형성기간으로 인해 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제공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러한 지원의 효율성과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야기하였다(행정자치부, 2015a). 그러나 지금 지역사회 수준에서 행해지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각종 시책은 그리 큰 체감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외국인 거주지역인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에도 아직 다문화 시책들에 대한 결정의 복잡성, 집행과정의 난맥상이 남아 있다(홍성희, 2012; 김태원, 2013).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부나 학계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의 증가현상에 대처하는 중앙과 지방차원의 각종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으며, 현 정부까지의 각종 다문화 시책들의 추진에 있어서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적 가치에 익숙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경험은 그동안 별로 없었으며, 이로 인한 초기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활동은 그 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좋은 다문화 사회 구축을 위한 지혜를 많은 학자들이 내놓고 있으나, 이 연구는 실제 다문화 가족의 삶과 속사정을 경험적으로 들여다보려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시도와 확인이다.<sup>1)</sup>

이러한 이유에서 이 연구는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정착의 문제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지역사회

1) 종래 우리 사회의 다문화 문제와 연관된 정부나 공공부문의 대응은 주로 새로운 제도적 장치나 정책방안 마련, 조직 신설 등과 같은 지원체계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 왔다(정명주, 2010; 박진경·원숙연, 2010; 이종열·범령령, 2010; 김형수, 2011; 정명주, 2012).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요에 대한 정부와 공급자 주도의 다소 편향된 조치였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특히 지역사회 수준으로 내려올 경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과 생활실태 사이의 괴리는 더욱 커진다.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수요 증가라는 현상의 변화에 비해서 정부나 지역사회의 적절한 대응과 처방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바람직하고 좋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책은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에서 이들이 서 있는 위치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는 타인과 이문화 사이의 이질적 성격에 기인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으면 좀처럼 나아지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구 다민족, 다인종 사회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역사회의 공동체(local community)가 함께 다문화 가족의 소수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협조와 노력 없이는 좋은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는다(Dworkin & Dworkin, 1999; Ryde, Alden & Paulhus, 2000).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통한 지역사회의 통합은 곧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도 이 연구의 규범적 취지이다.

이상의 배경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현 단계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그 영향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적응정도를 점검하고, 그 원인에 대한 국내 및 해외연구를 고찰하여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현실화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일단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전략적 시사점과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이 문제의 정책적 관리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족 문제와 지원책에 있어, 다양한 논리적 토대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이 연구가 갖는 뚜렷한 차별성과도 다르지 않다.

## II.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이론적 요인들

### 1. 다문화 가족과 지역사회 적응

다문화 가족(multicultural families)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비교적 근래에 등장하였음에도, 원래부터 그 의미는 무척 다양하다. 먼저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의 남녀가 이룬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널리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 가족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족”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한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통칭하는 의미를 갖는다(곽병선·김희숙 2000: 여중철, 2010). 이에 다문화 가족에는 하나의 가족 내에 둘 이상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이런 경우 여러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적인 문화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반면 양

족 문화를 스스로 잘 수용한다면 문화적 다양성의 장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제도적으로 살펴보자면, 다문화 가족은 현재 개정된 <다문화 가족지원법(법률 제11284호)>에서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법무부, 2015). 그것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제2조와 제3호의 결혼이민자 조항과 <국적법>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일단 이 연구에는 기존의 국제결혼가족, 이중문화가족 등으로 불리던 의미를 다문화 가족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그 신분을 거주외국인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즉 이는 거주외국인 부부 중에서 어느 한쪽이 외국인일 경우에 해당하며,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극소수의 경우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조사할 것이다.<sup>2)</sup>

현재 우리에게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분명 새롭게 다가오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노력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홍성희, 2012; 김태원, 2013; 행정자치부, 2015a). 그런데 지역사회 차원의 다문화 가족 증가는 사회적 이슈로서의 논의토대가 미약하였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에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굳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박진경, 2010; 정명주, 2012). 즉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정착 문제는 국가적 해결사안으로 치부되어, 지역사회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점차 세대화, 집단화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오히려 다문화 가족의 가정폭력, 이혼, 범죄 등의 여러 크고 작은 문제는 지역사회 밑바닥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은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진숙·이혁구·이근무, 2010; 여중철, 2010; 홍성희, 2012). 보다 조작적인 정의를 하자면, 지역사회 적응은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통합하는 과정에서 가정생활, 결혼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에서의 만족감”으로 개념화하되,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생활상에서의 주관(subjectivity)으로 파악하고자 한다.<sup>3)</sup>

2) 최근 내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현은 크게 혼혈인 가정(서로 다른 인종 간 태어난 자녀), 국제결혼가정(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 다문화 가족(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 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탈북자 등)을 포함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은 가족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던 국제결혼가족이라는 용어를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판단하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 때의 지역사회(local community)가 갖는 의미는 “일정한 크기의 지리적 영역(geographic community)을 가진 지역과 인간집단”을 뜻하는 의미로, 보통 공동체意識(communitiy sense)을 가진 인간집단이 사는 작은 규모의 사회를 말한다. 지역사회는 공간적 의미의 지역사회 외에 비공간적 의미가 더해지는데,

## 2. 지역사회 적응의 영향요인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실제로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각종 문화접변과 부적응 양상은 크다. 그런데 그동안 이들이 가지고 들어온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충분하게 고려 하면서,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드물었다. 이는 앞으로 다문화 가족의 적응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기존 문헌에 의하면, 이주생활을 하는 다문화 가족 적응에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에는 출신국가, 경제수준, 교육수준, 종교여부, 거주기간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 다문화 가족에서 지역사회 적응의 수준과 정착속도는 출신국가(country of origin) 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의 경우, 출신국가에 따라서 국내이주의 역사도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며, 이주의 동기나 목적도 약간씩 차이를 나타낸다(한국행정학회, 2009). 즉 다문화 가족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태국, 필리핀, 베트남, 기타 러시아 및 구미국가 등의 출신유형은 모두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다문화 가족은 대략 일본, 중국(조선족 포함), 유럽계 등이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쪽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다문화 가족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한승미, 2010; 공수연·양성은, 2011; 장진경·신유경, 2012; 김태원, 2013).

둘째, 다문화 가족에서 경제수준(economic level)은 지역사회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적 환경은 다문화 가족의 정착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요인이며, 곧 적응과 부적응을 유발시키는 핵심적인 조건이다. 이민가정은 경제적인 자원이 풍부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수록 현지에서의 적응력이 높다는 것이 국제적인 정설이 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족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위는 곧 자녀의 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에서도 이제 낯선 가설이 아니다(Dworkin & Dworkin, 1999; Kivisto, 2002; Nelson et. al, 2008; Castles & Miller, 2009; 여중철, 2010; 박진경, 2010).

셋째, 다문화 가족에서 이민자의 교육수준(education level), 즉 기존의 학력(academic

---

기능적 측면에 더하여 공동체적 의미가 부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다문화 가족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는 동질성(identification)이나 공유된 이익(interest)을 가진 사회로 설명할 수 있다(Berry, 2005; Castles & Miller, 2009; 박진경, 2010; 공수연·양성은, 2011; 성향숙, 2011).

background)은 지역사회의 적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학력수준은 출신국가 만큼이나 다양하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나 이주여성의 경우, 본국에서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도 언어습득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국가 중에서 학력이 높은 집단은 일본, 중국한족, 러시아나 구미유럽계 쪽이 많고, 학력이 낮은 집단은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계가 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다른 학습능력과 지식습득의 효율이 저하되고 지역사회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부모의 학력이 높은 다문화 가족에서는 이웃에 대한 응대와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승미, 2010; 현경자·김연수, 2011; 장진경·신유경, 2012).

넷째, 다문화 가족에서 종교(religion)나 신앙(religious faith)의 여부도 이민국 정주의 성공에 제법 비중 있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일상생활에서의 안녕과 보호를 제공해주며, 타지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심리적으로 잘 극복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수자에게 종교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연대감을 강화시켜주기도 하며, 삶의 의미나 목적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도 한다(Dworkin & Dworkin, 1999). 그러므로 사회적 소수자인 다문화 가족의 경우, 본국에서 이민자가 가져온 종교의 의미는 더욱 각별해진다. 일부 연구들은 다문화 가족이 종교행사 참여와 종교단체의 피지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지지 획득이 가능하다고 본다(장진경·전종미·신유경, 2008; 송지현·이태영, 2010). 따라서 다문화 가족의 삶과 정착에는 대체로 각 나라의 여러 종교적 배경이 일정 부분 작용하는 점이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의 거주기간은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정착에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다수 연구에서 이민자나 다문화 가족의 입국 이후 거주기간 혹은 체류기간이 그들의 적응의 정도와 많은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Dworkin & Dworkin, 1999; Beiner, 2006; 이종열·범령령, 2010; 김진숙·이혁구·이근무, 2010; 장한나·윤기찬, 2010; 우양호, 2012). 즉 모국을 떠나 국내에 오래 거주할수록 높은 적응도를 보이며, 이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거주기간과 적응은 대체로 비례관계인 경우가 많아, 이것을 지역사회 적응문제와 결부시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2) 커뮤니케이션 특성

다문화 가족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문제는 최근 이주민의 적응을 문화적 문제에 국한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일상적인 대인관계와 적응속도를 결

정것는 요인으로 이론적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적 기술(linguistic technique)과 소통언어(communicative language)의 문제이다. 다문화 가족이 공통적으로 처음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차이가 바로 이 문제이다. 이 때의 언어적 기술과 의사소통은 어휘구사 수준, 언어의 명확성, 제스처의 기술성, 의사전달의 자신감 등을 포괄적으로 뜻한다(Beiner, 2006).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관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기술이 미숙하면 대인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또한 언어의 문제는 가족 내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혈연, 지연, 학연 등 지역사회의 중요한 관계형성의 통로를 결여한 채로 가족 외부에서 관계를 맺을 기회가 거의 없는 다문화 가족은 자신감 없는 언어능력에 기인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게 된다. 언어문제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문화 가족은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신의 자녀보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은 다문화 가족만의 특징적 현상이다(성향숙, 2011; 홍성희, 2012; 김태원, 2013; 우양호·안미정, 2015).

둘째, 다문화 가족의 커뮤니케이션은 외부활동의 참여(participation)나 능동성(activity)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다문화 가족에는 스스로의 친목모임 및 참여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문화의 상당부분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은 여가활동이나 문화생활을 통해서 타인의 사고와 타문화의 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김희순·정희선, 2011). 특히 평소 집에만 있는 것보다 능동적인 야외활동을 하는 가족이 지역사회에 빠른 융화가 이루어진다는 결과도 있다(Haklai, 2009). 전반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증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맡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과의 연결망(network) 구축이며, 이것은 곧 외부와의 소통과 참여인 것으로 이해된다(Levitt & Jaworsky, 2007; Nelson et. al, 2008; Good, 2009). 부녀회, 반상회와 같은 주민자치활동 및 취업, 봉사활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활동의 자발적 참여가 다문화 가족의 일상 적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다문화 가족의 조기정착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안팎의 지리(geographical position)를 잘 알고, 공간적 인식을 명확하게 하여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편의시설 및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적응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의 일상생활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와 편의시설, 여가시설, 긴급 상황에서 요구되는 의료시설 등이다. 반면에 교육, 문화, 의료, 사회참여 등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이용기회가 배제되는 것은 다문화 가족의 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장진경·전종미·신유경, 2008;



송지현·이태영, 2010). 다문화 가족이 새로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 및 편의시설들에 익숙해지거나 이에 대한 이용법을 익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활적응(life adaptation)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Berry, 2001; Tsuneyoshi, Okano & Boocock, 2011).

### 3) 심리적 특성

지역사회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공동의 관심과 연합을 뜻하기도 하므로, 많은 연구들은 다문화 가족의 심리적 적응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심리적 특성은 곧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서 심리적인 복리나 양호한 정신건강,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심리 내적인 결과로서 개인적 정체성, 좋은 정신건강, 그리고 새로운 문화환경에서의 개인적인 만족감과 성취 등이다.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다문화 가족의 심리적 특성에는 자기정체성과 효능감, 타문화이해와 유연성, 타인신뢰와 정착의지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 다문화 가족에서의 자기정체성(self-identity)과 효능감(self-efficacy)은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다. 자기정체성이란 자기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시키고 고양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trait)이다. 다문화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소수 이민자 집단으로 생활을 해 나가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혹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해 많은 혼돈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다문화 가족이 자신들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느끼는 정도가 주변인들이 다문화 가족을 한국인으로 느끼는 정도보다 크다는 보고가 있다(곽병선·김희숙 2000; 여중철, 2010). 이것은 자기정체성에 있어서 다문화 가족이 처한 환경간에 적합함(fit)을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문화 가족의 자기정체성이나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태도, 가치, 신념, 정신건강에서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것은 이후의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결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이 출신국 문화와 전혀 다른 생활에 부딪혔을 때 지역사회에 대해 위축감을 가지고 심리적인 벽을 쌓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소수자 적응에 관한 다수 문헌은 이것을 자기효능감 혹은 자긍심으로 정의하고 있다(Berry, 1980; Dworkin & Dworkin, 1999; Berry, 2001; Fleras, 2009).

둘째, 다문화 가족에서 심리적으로 타문화의 이해도(multicultural understanding)가 높고 유연함을 갖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적응의 속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역사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적응에 관한 이론이나 연구는 그들이 사회의 소수자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물론 다문화 가족이 심리적으로 자신의 뿌리가 되는 문화(original culture)를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만들어 일상 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기까지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Ryde, Alden

& Paulhus, 2000; Kymlicka & Norman, 2000). 게다가 다문화 가족은 지금껏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적응의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다문화 가족에서 다른 문화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진 사람일수록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Levitt & Jaworsky, 2007; 송지현·이태영, 2010; 김희순·정희선, 2011).

셋째,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은 타인에 대한 신뢰(trust)와 정착에 대한 자기의지(willingness for resettlement)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 내국인, 원주민들의 눈에 비친 다문화 가족의 이미지는 대부분 그들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의지가 있으며, 공생을 위해 그만큼의 봉사와 공헌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다문화 포용을 위한 정착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정착 수혜자들의 신뢰나 정착의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주민과 원주민 관계에서의 신뢰형성과 정착의지의 조작적 의미는 곧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거주 지역사회에서 심리적으로 적절하고 편안하게 살려는 노력이다(Johnson & Bill Ong Hing, 2005).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공생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먼저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인식과 다문화 가족의 정착의지가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하다(Beiner, 2006; Kymlicka & Norman, 2000; McGoldrick, 2005). 따라서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람에 대한 이해도, 신뢰도, 거주희망과 정착의지의 수준이 높다면 적응문제의 상당부분은 해소된다.

#### 4) 제도적 특성

우선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는 이들의 적응과 정착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이면서, 공공적 지원의 배경으로 작용되는 중요한 기제(mechanism)라는 의견이 많다(Kelly & Meyers, 1995; Ryde, Alden & Paulhus, 2000; Castles & Miller, 2009). 최근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다문화 가족의 범개념적 범위가 확대되었고, 지역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다문화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과 조례의 실효성, 제도의 체감성을 통해 적응과 정착의지를 갖는다는 점이 중요하다.<sup>4)</sup>

4) 정부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법률 제8442호, 2007.5.17. 제정)과 다문화 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

보다 세부적으로 법·제도를 근거로 행해지는 2차적인 정책·프로그램상의 지원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처우에 관한 노력의 실질적 주체와 접점이 지방정부와 일선 공공기관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회적응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의 평가를 기간별로 나누어, 현 단계의 문제점을 다음 단계의 사업 추진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까지 포함된다(정명주, 2010; 홍성희, 2012). 다문화 가족이 스스로 느끼는 이러한 공적 지원제도의 수준,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효성, 만족도 등은 실제 적응과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장한나·윤기찬, 2010; 장진경·신유경, 2012; 우양호·안미정, 2015).

### 5) 지방정부 특성

현행 지방자치법 상에 각 지방정부는 법적으로 각자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행위자이므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각종 정책이나 업무는 개별 행정구역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에서 다문화 가족에 투입되는 지방정부의 자원(resources), 즉 인력과 예산(human and budget)의 규모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책의 성과를 가늠하는 동시에 성과에도 차이를 보여주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도시나 지방정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지역경제가 크며, 전반적인 행정적 역량(capacity)도 좋다. 지방정부가 각종 가용 자원의 측면에서 상대적 인 우위를 가지면, 그만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건이 호의적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다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역동하는 힘(force)을 바로 그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의 역량과 효율성에서 나오는 성과로 파악하기도 한다(박진경·원숙연, 2010).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공공부문 인력과 예산의 충분성은 그래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이로미·장서영, 2010; 김형수, 2011; 정명주, 2012; 우양호, 2013).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에서 정부에 의한 공적 지원시설과 서비스 체계(facilities and service system)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성 있는 적응요소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외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문화원, 대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도 다양한 전문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글로벌센터, 국제문화복지센터, 다문화체험교실, 사랑방, 어울림 마당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이문화 전용공간(space)을 만들었다. 각종 언어능력 향상과 맞춤형 생활지원서비스도 이 공간들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방문 및 외국인 전용안내, 근로, 혼인, 비자, 교육, 주택, 취업, 의료, 방재에 걸쳐 다국어상담과 정보교환이

2008.3.21 제정), 거주외국인지원표준조례안,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업무추진 지침 등을 근거로 각 지방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외국인인권조례,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외국인학 교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들었으며, 이는 실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의 인력과 예산상에서 중요한 근거조항이 되고 있다.

제공되며, 최근에는 연·기금, 생활복지, 단체결성 및 시민권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정명주, 2012; 법무부, 2015; 행정자치부, 2015b). 따라서 이러한 공적지원시설의 규모, 시설과 서비스 질이 높을수록 다문화 적응수준도 높아지게 된다는 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 6) 지역환경적 특성

지역사회라는 상위체계는 환경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외부에 있으면서, 가정생활에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단위라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은 지역사회라는 '환경 속의 인간(person-in environment)'이기 때문이다. 환경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지역문화의 특성, 지역주민의 태도, 자원봉사와 시민단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지역문화의 특성(characteristics of local culture)은 곧 지역문화의 개방성(openness), 관용성(tolerance), 다양성(diversity), 친화성(friendship)이 다문화 가족과 깊은 연관이 있음이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 있다. 즉 원래부터 지역문화가 외국문화에 대해 열려 있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관용과 포용력이 높다면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족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가 가능하다. 특히 지리적 특성이나 문화유산에 영향을 받는 지방문화의 고유한 속성은 중요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구성요소이자, 지역주민의 내면의식에 자리잡고 있는 사고의 기저를 형성한다. 지역문화의 이러한 특성들은 기존 토착문화에 의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그 결과상의 차이도 이문화에 대해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다(Beiner, 2006; 성향숙, 2011; 홍성희, 2012; 김태원, 2013).

둘째, 지역주민의 태도는 사람들이 원래 비슷한 것을 먹고 같은 언어를 쓰며 비슷한 행동을 할 때 좀 더 편안하고 가깝게 느낀다는 상식에 근거한다. 토착적인 지역주민의 의식적 뿌리는 너무도 깊고 강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을 이웃으로 맞이하게 되면 어떤 가치관과 태도는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은 거부하면서 그 문화권과 소통하게 된다. 의식과 태도(consciousness and attitudes)는 주민이 기존의 그들만이 아닌 다문화적 수준에 맞춰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문화에 대한 이해(consideration)와 감수성(sensitivity)이 포함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을 이웃처럼 생각하는 토착주민의 넓은 사고와 태도, 내·외국인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도, 감성적 교류는 다문화 가족의 적응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곽병선·김희숙 2000; 한승미, 2010; 장진경·신유경, 2012; 홍성희, 2012).

셋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와 시민단체가 가진 역량(capacity of local civil society)은 최근 중요한 적응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하는 자원봉사자와 시민종교단체는 환경적으로 지역사회 다문화 지수를 높이는 중요한 가용자원(available resources)이자, 정부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Tsuneyoshi, Okano & Boocock, 2011).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문화 가족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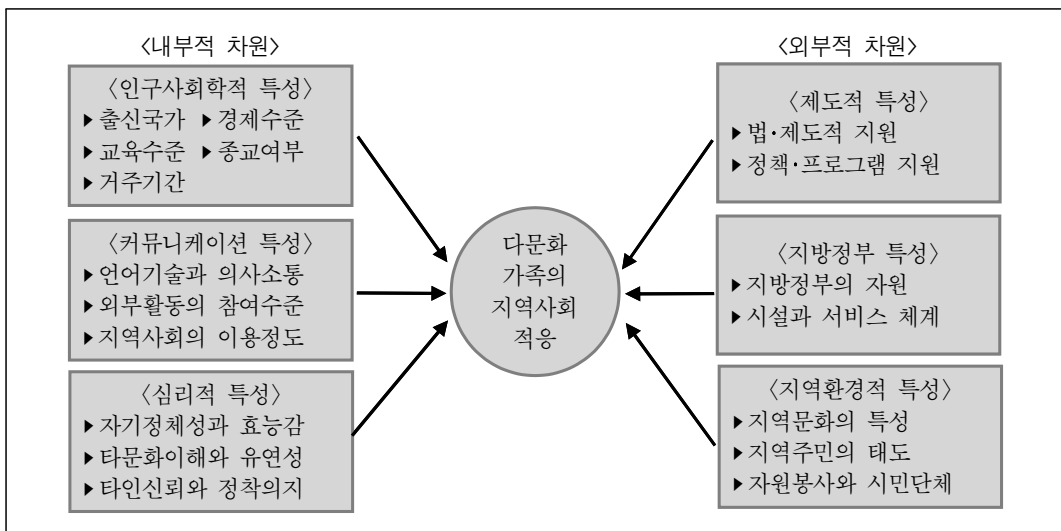
원사업 상당수가 지방정부 및 지역NGO 등 시민사회와 활발하게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직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자원봉사나 시민단체의 활동이 성숙된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들의 활동역량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것은 기존연구에서 충분히 밝혀지고 있다(한국행정학회, 2009; 박진경, 2010; 장한나·윤기찬, 2010; 김희순·정희선, 2011; 안미정·우양호, 2015).

### Ⅲ. 연구설계

#### 1. 연구모형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논의하였다. 앞서 제시된 논거들처럼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그 요인에 대한 실증은 아직 정확하게 자리를 잡은 상황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론에 준거한 모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논거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논의된 변수는 크게 다문화 가족의 내부적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커뮤니케이션 특성, 심리적 특성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제도적 특성, 지방정부 특성, 지역환경적 특성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림 1> 연구모형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출신국가, 경제수준, 교육수준, 종교여부, 거주기간이 제시되었고, 커뮤니케이션 특성에서는 언어기술과 의사소통, 외부활동의 참여수준, 지역사회의 이용정도가 제시되었으며, 심리적 특성에서는 자기정체성과 효능감,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유연성, 타인에 대한 신뢰와 정착의지가 제시되었다. 또한 제도적 특성에서는 법·제도적 지원, 정책·프로그램 지원이 있었고, 지방정부 특성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원, 시설과 서비스 체계가 있었으며, 지역환경적 특성에서는 지역문화의 특성, 지역주민의 태도, 자원봉사과 시민 종교단체가 주요 변수로 제시되었다. 이들 논의된 변수들을 토대로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총 18개 독립변수들을 각각 상징하여 <그림 1>과 같은 인과관계를 도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모형과 가설적 관계는 앞으로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생각된다.

## 2. 조사설계와 자료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각각 현황자료와 설문자료로 구분된다. 먼저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현황자료는 국무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각 지역들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현황자료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적응에 대한 주요 실태, 통계현황, 정책동향정보 등을 입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현재적 공과(功過)를 논의하였다(법무부, 2015; 행정자치부, 2015a).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자료는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그 대상이 선별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대도시에서 두드러지는 다문화 경향에 대비, 대도시로서의 국제교류의 역사와 거주인구의 대규모성, 수도권 및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일반화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서울과 주요 도시들은 외국문물에 상대적으로 익숙하고 부산과 인천, 울산 등은 외국과의 국제무역을 통해 지역발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도시와 연안지역에서 다문화 현상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곽병선·김희숙, 2000; 김형수, 2011). 무엇보다 이들 대도시들은 공통적으로 동북아시대에 국제교류도시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다문화 선도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 다문화 가족의 적응에 대한 분석결과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의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물론 특별시와 광역시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도 체계적

이어서 현황명단의 정확성과 조사협조 등의 용이성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 가족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개인의 경험을 위주로 응답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선 이론적 논의와 같이 다문화 가족이 급증한 현재 단계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사회 적응은 다문화 가족 단위에서 중요하며, 이는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경험에 근거하므로, 이를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개념이다(Kivistö, 2002; Levitt & Jaworsky, 2007).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 이민자 개인의 인식만을 주로 연구한 선행연구와 이 연구는 서로 일정한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 및 전국 6대 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2차례에 걸쳐 총 34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예비조사(pilot study)로 서울에 대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가족 10가구와 방문지도사 3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곳에서 추천 받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서 기존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찾아내지 못한 지역사회 적응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면접내용이 이론에서 도출된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만 질문형식이 1인칭과 외국인 타자의 입장에서 쉽고 구체적인 필요가 있어 일부 수정을 하였다. 또한 다문화 전문가 3인에게 별도로 설문형식과 요인에 대한 적절성을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단계에서는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기로 한 전국 대도시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곳에 조사원을 3일 정도씩 상주시켜, 총 347가구에 대하여 가구 당 1부씩 면접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이 때 해당 센터의 다국어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문항을 설명하고, 언어별로 이해를 도운 다음 설문지를 수거하였다.<sup>5)</sup>

5) 이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방식을 통한 측정은 질문대상 외국인이 해당 문항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가진다(informed person)는 전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다문화 정책이나 제도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지를 이미 하고 있는 경우는 적다. 이것을 'attribution error(귀속오류 또는 귀인오류)'라고 하는데, 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사 이전 응답대상을 정보가 숙지된 사람들로 잘 선정하거나 전 대상자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연구는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리명부에서 사전 추천을 받아 표본가족을 선정하였으며, 법·제도나 정책 등에 대해 다문화가족 응답자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및 해당 언어로 비치된 유인물을 동시에 활용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1〉 변수목록과 측정<sup>6)</sup>

차원	변수(문항 수)	측정내용	신뢰도( $\alpha$ )
종속변수	지역사회 적응(4)	지역사회의 이해도, 결혼·가족생활의 만족도, 지역구성원의 역할수행도	.8125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5)	출신국가, 경제수준, 교육수준, 종교여부, 거주기간	가변수
커뮤니케이션 특성	언어기술과 의사소통(4)	어휘구사 수준, 언어/ 제스처의 명확성, 기술성, 의사전달의 자신감	.8927
	외부활동의 참여수준(3)	야외활동의 참여수준, 야외활동의 능동성, 여가 및 문화활동 수준	.9023
	지역사회의 이용정도(3)	지리와 공간인식, 관공서/공공시설 이용정도, 생활편의시설 이용정도	.8022
심리적 특성	자기정체성과 효능감(3)	자국민으로서의 긍지, 자아신뢰, 자기가치감	.7876
	타문화이해와 유연성(3)	한국문화의 이해도, 선호도, 수용성	.7643
	타인신뢰와 정착의지(3)	한국인의 이해도, 신뢰도, 거주희망 수준	.7790
제도적 특성	법·제도적 지원(2)	지원법과 조례의 실효성, 제도의 체감성	.7821
	정책·프로그램 지원(2)	지원정책의 실효성, 프로그램 만족도	.8011
지방정부 특성	지방정부의 자원(2)	지방정부의 인력의 충분성, 예산의 충분성	.8212
	시설과 서비스 체계(2)	지원시설의 규모, 시설과 서비스의 질	.7954
지역환경적 특성	지역문화의 특성(3)	지역향토문화의 개방성, 관용성, 다양성	.8795
	지역주민의 태도(3)	이웃주민의 관심도, 이웃간 친화성, 감성적 응대	.8153
	자원봉사와 시민단체(2)	자원봉사자 지원수준, 시민종교단체 활동수준	.8002

주요 도시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소요된 기간은 약 4개월(2015년 10월~2016년 1월)이었다. 1차 예비조사는 2015년 9월에 이루어졌고, 2차 조사는 그 이후 4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다문화 가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분포는 무난하였다. 앞선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과 그 측정치를 수집된 자료를 통해 최종목록으로 정리하고,

6) 다문화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가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고, 나머지 변수는 응답자의 주관적 측정(subjective measure)치로서 Likert-type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설문지는 측정 오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항목 척도의 형태로 최소 2개 이상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전문가 패널자문을 거친 예비점검(pilot study)을 통과한 질문만 최종설문에 투입되었다.



각 변수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각 평가항목별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값이 모두 0.70을 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sup>7)</sup>

## IV. 분석과 논의

### 1. 지역사회와의 다문화 가족 현황과 지원

우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첫 조사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다문화 가족의 규모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5)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은 약 150만 명, 다문화 가족은 약 3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시·도의 다문화 가족은 300,842가구로 집계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신분별로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이 상당수로, 결혼이민과 취업목적의 거주가 대다수에 달한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중국(한국계 포함),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일본, 몽골, 대만,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 등으로 국적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족은 2011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약 5%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주환경과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도시에서 그 경향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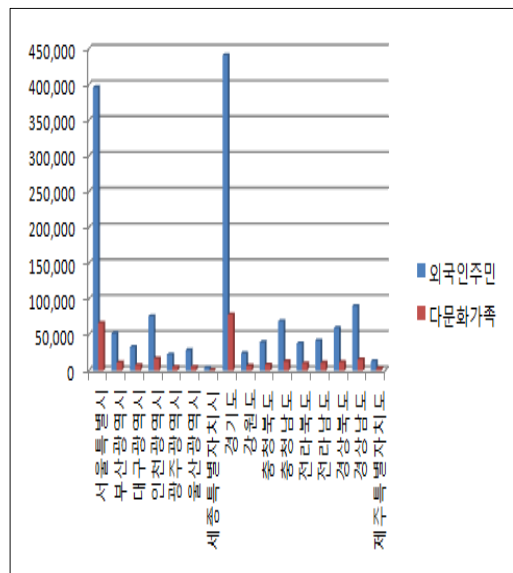
7) 조사에 응답한 다문화 가족의 응답표본(N=347)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출신국가는 중국(한국계 포함)이 129명(37.1%), 베트남이 82명(23.6%), 필리핀이 57명(16.4%), 일본이 27명(7.8%), 러시아가 16명(4.6%), 캄보디아가 15명(4.3%), 미국이 9명(2.6%), 태국이 6명(1.7%), 인도네시아가 6명(1.7%) 등으로 나타났다. 본인이나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30대가 169명(48.7%), 20대가 105명(30.3%), 40대가 57명(16.4%), 50대가 16명(4.6%)순이었다. 본인이나 외국인 배우자의 학력은 중졸급이 155명(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급이 126명(36.3%), 대졸급이 43명(12.4%), 초졸급이 23명(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217명(62.5%), 200만원~299만원이 115명(33.1%), 300만원~399만원이 12명(3.5%), 400만원 이상이 3명(0.9%)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여부는 276명(79.5%)이 갖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고, 그 순서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타교의 순이었다. 자녀의 유무는 있다 252명(72.6%), 없다는 95명(27.4%)으로 대부분의 다문화 가족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기간은 5년 미만이 113명(32.6%), 5년 이상이 234명(67.4%)였다. 표본의 거주지는 서울특별시의 강남지역 24가구(6.9%), 강북지역 63가구(18.2%), 부산광역시 74가구(21.3%), 인천광역시 58가구(16.7%), 대구광역시 54가구(15.6%), 대전광역시 39가구(11.2%), 울산광역시 35가구(10.1%)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국 대도시의 다문화 가족은 40대 이하의 중국출신 구성이 많고, 학력은 고졸 이하와 소득은 300만원 이하 수준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대다수 가정에는 다문화 자녀가 1명 이상 있었으며, 정부가 파악한 전체 지역별 거주외국인 인구비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5; 행정자치부, 2015b).

지금 전국 주요 지역에서 다문화 가족의 증가세는 공통적으로 전체 입국자 및 외국인 주민과 비례시키더라도 높은 수준이며, 이는 다문화 가족 가구의 자녀들 숫자가 더해져 증가폭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5). 그러므로 이처럼 늘어만 가는 다문화 가족을 이제 국가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거나 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문화 가족의 거주목적이나 출신국가도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와 정부차원에서의 시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정착이 되지 못하면 국가 사회적인 비용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전국 주요 지역의 다문화 가족 분포현황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21,548	252,764	267,727	280,642	300,842
서울	63,364	69,694	70,381	71,364	73,801
부산	8,314	9,705	10,305	10,915	13,529
대구	5,599	6,261	6,664	7,131	8,580
인천	13,235	14,939	16,029	17,026	18,222
광주	3,705	4,283	4,590	4,960	6,336
대전	4,117	4,758	5,123	5,337	6,575
울산	3,755	4,225	4,561	5,049	5,497
경기	61,447	71,174	77,128	81,731	86,337
강원	4,809	5,793	6,103	6,381	6,590
충북	6,023	6,982	7,417	7,941	8,370
충남	9,544	11,294	12,348	12,649	13,460
전북	7,197	8,523	9,068	9,626	9,951
전남	8,142	9,489	10,115	10,657	11,129
경북	9,232	10,461	11,067	11,856	12,620
경남	11,345	13,062	14,443	15,352	16,217
제주	1,720	2,121	2,385	2,667	2,978



그런데 다문화 가족의 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전국 광역시·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에게 2010년부터 매년 약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170여 개 사업에 걸쳐 다양하게 집행되고 있으나, 모두 중앙정부의 국고 예산이며 지방정부의 예산비중은 낮다. 최근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들의 경우를 보자면, 이들 도시의 다문화 관련 예산은 대부분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 서울은 21조 5,498억원 중에서 2,585억원(약 1.2%), 인천은 7조 8,254억원 중에서 711억원(약 1.1%), 대구는 6조 206억원 중에서 842억원(약 1.4%), 대전은 4조 712억원 중에서 651억원(약 1.6%), 광주는 3조 6,179억원 중에서 361억원(약

1.1%), 울산은 2조 7,852억원 중에서 473억원(1.7%)을 거주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관련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다(행정자치부, 2015c).

물론 이러한 원인은 지방정부와 지역들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일 수도 있으며, 예산의 정책적 순위가 상대적으로 각 지역의 다른 현안들에 밀리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물적 토대이므로, 이것이 열악하고 지역들 사이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문제시될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단 여기에 대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sup>8)</sup>

## 2.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수준과 영향요인

### 1) 요인의 타당도 검증

앞서 논의된 다문화 가족의 분포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이들의 적응과 지원의 당위성은 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민선자치시대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향후 다문화 가족의 적응수준과 정착이 향상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론적 논의에 따라 먼저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설계에 따라 전국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자료의 타당도를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즉 이는 통계프로그램(SPSS 20.0K)을 사용하여 독립변수 차원의 각 구성변수를 의미 있게 요약하고, 그 하위개념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잠재변수의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의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단일차원성을 재검사하여, 확인요인분석으로 검증된 요인만 새로운 변수로 저장하여 이후의 인과분석에 활용해야 한다(이학식·임지훈, 2013).

〈표 2〉와 같이 가변수(dummy variable)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외하면, 등간비율척도로 측정된 모든 변수들은 각각의 개별요인으로 판별되어, 서로 중복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경우에  $p$ 값( $>0.05$ ), GFI, RMSR, NFI값 등에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가 없었고, 이러한 측정의 타당성은 기존 국내외의 사례나 실험으로 다문화 가족의 적응원인을 설명한 다수 연구 및 문헌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8) 2015년 전국 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5.2%이다. 서울 및 6대 광역시만 놓고 본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순서로 서울특별시 80.0%, 인천광역시 62.6%, 울산광역시 61.4%, 부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51.4%, 대구광역시 46.1%, 광주광역시 41.9%, 대전광역시는 49.4% 등이다. 그러나 각 지역의 인구규모와 지역총생산 규모가 같이 고려된다면, 우리나라 대도시들의 다문화 관련 예산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2014c).

〈표 2〉 변수에 대한 확인요인분석과 신뢰도

요 인	최초변인	최종변인	GFI	AGFI	RMSR	NFI	$\chi^2$	p
커뮤니케이션 특성	3	3	0.928	0.919	0.039	0.995	6.351	0.057
심리적 특성	3	3	0.934	0.949	0.046	0.957	6.482	0.064
제도적 특성	2	2	0.926	0.906	0.027	0.976	8.410	0.068
지방정부 특성	2	2	0.918	0.935	0.023	0.922	6.564	0.059
지역환경적 특성	3	3	0.936	0.943	0.021	0.925	5.528	0.071
지역사회 적응	1	1	0.924	0.964	0.025	0.968	6.763	0.052

## 2)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수준과 차이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수준 및 차이에 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집단별 차이분석을 이용했고 그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의 평균값은 곧 현재 지역사회 적응수준의 수준이 된다. 평균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적응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론적 논의처럼 다문화 가족은 교육수준, 경제수준, 출신국가, 종교여부, 거주기간 등에 따라 지역사회 적응수준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표 3〉과 같이 지역사회 적응수준 수준 전체는 그 평균이 약 3.60으로 나타나 보통수준(3.0)을 상회하고 있다. 대부분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수준은 비교적 무난한 셈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 적응수준의 평균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집단별로 상당부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나눈 집단별로 지역사회 적응수준의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보면 가장 뚜렷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은 경제수준의 차이이다. 이어 거주기간, 출신국가, 종교여부, 교육수준에서도 모두 통계적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이민의 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수준이 뚜렷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Dworkin & Dworkin, 1999; Kivisto, 2002; Nelson et. al, 2008; Castles & Miller, 2009; 여중철, 2010; 박진경, 2010; 한승미, 2010; 공수연·양성은, 2011; 장진경·신유경, 2012; 김태원, 2013). 평균값으로 판단해 볼 때 대체로 그 경향성은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종교를 가질수록 적응의 수준이 높았다. 국가별로는 구미·유럽계가 지역사회 적응수준이 높고, 동남아시아 국가출신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낮았다.<sup>9)</sup>

<표 3>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수준과 인구학적 특성 차이

인구학적 특성		지역사회 적응 수준	
		평균	F값
교육수준	초졸	3.3529	3.427*
	중졸	3.6027	
	고졸	3.6856	
	대졸이상	3.7435	
경제수준	200만원 미만	3.1315	8.976***
	300만원 미만	3.4171	
	400만원 미만	3.6366	
	400만원 이상	3.8813	
출신국가	구미·유럽	3.7206	7.328**
	러시아	3.4645	
	중국	3.2669	
	일본	3.2948	
	동남아시아	3.1103	
종교여부	종교 있음	3.7965	6.031***
	종교 없음	3.2439	
거주기간	5년 미만	3.2899	8.192***
	5년 이상	3.9423	
전체(N=347)		3.6021	

주) \*\*\*p<0.001, \*\*p<0.01, \*p<0.05.

### 3) 지역사회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은 <표 4>와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출신국가, 경제수준, 교육수준, 종교여부, 거주기간을, 커뮤니케이션 특성에서 언어기술과 의사소통, 외부활동의 참여수준, 지역사회의 이용정도를, 심리적 특성에서 자기정체성과 효능감, 타문화의 이해와 유연성, 타인에 대한 신뢰와 정착의 지를, 제도적 특성에서 법·제도적 지원, 정책·프로그램 지원을, 지방정부 특성에서 지방정부

9)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집단별 구분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 경제, 국가, 거주기간은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2012년, 2015년)”의 조사기준에 근거하였다. 이는 법령을 근거로 2009년부터 매 3년 단위로 조사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특히 2015년 조사에서 다문화 가족의 기존 체류기간은 평균 5.4년으로 나타나, 최근 정부는 통상 5년을 기준으로 이들의 정착과 귀화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구분방식은 인과분석시 가변수(dummy variable)의 기준으로도 재사용되었다.

의 자원, 시설과 서비스 체계를, 지역환경적 특성에서 지역문화의 특성, 지역주민의 태도, 자원봉사와 시민중요단체를 각각 개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각 변수의 측정항목들이 다문화 가족의 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값을 추정한 것이다.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Adjusted R<sup>2</sup>)는 0.517, 회귀모형의 F값은 125.684(p<0.001)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9개의 변수들에 의해 상당부분이 설명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값)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표 4>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TOL	VIF	
모형								
(상수)	5.186	4.154		1.249	.219			
인구사회학적 특성	출신국가*	6.570E-02	.091	.025	.722	.472	.311	3.213
	경제수준*	.219	.082	.115	2.677	.009	.216	4.628
	교육수준*	.135	.054	.107	2.491	.015	.242	4.127
	종교여부*	.190	.178	.092	1.625	.108	.114	8.760
	거주기간*	.128	.049	.102	2.119	.039	.177	6.632
커뮤니케이션 특성	언어기술과 의사소통	.146	.071	.173	2.050	.043	.286	3.500
	외부활동의 참여수준	.162	.033	.286	4.880	.000	.254	3.938
	지역사회의 이용정도	.133	.082	.057	1.608	.112	.299	3.345
심리적 특성	자기정체성과 효능감	.185	.101	.068	1.831	.071	.267	3.744
	타문화이해와 유연성	.163	.033	.287	4.897	.000	.253	3.952
	타인신뢰와 정착의지	.811	.035	.528	23.070	.000	.287	3.483
제도적 특성	법·제도적 지원	4.525E-02	.039	.041	1.164	.248	.303	3.300
	정책·프로그램 지원	4.905E-02	.039	.044	1.259	.211	.312	3.208
지방정부 특성	지방정부의 자원	7.451E-02	.095	.029	.781	.437	.269	3.719
	시설과 서비스 체계	.119	.047	.135	2.538	.013	.131	7.657
지역환경적 특성	지역문화의 특성	1.097	.567	.573	1.935	.060	.157	6.381
	지역주민의 태도	5.621E-02	.060	.024	.937	.351	.584	1.712
	자원봉사와 시민단체	.132	.046	.150	2.849	.005	.138	7.240
R <sup>2</sup> = .528		Adjusted R <sup>2</sup> = .517		F = 125.684				

비고) \* 표시는 가변수(출신국가는 동남아권=0, 동북아권=1, 구미/유럽/기타권=2; 경제수준은 저소득층=0, 중산층=1, 고소득층=2; 교육수준은 중졸이하=0, 고졸=1, 대졸이상=2, 종교여부는 종교 있음=0, 종교 없음=1, 거주기간은 5년 미만=0, 5년 이상=1).

먼저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서 크게 보면, 유의미한 요인이 각각 2개 이상 나타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커뮤니케이션 특성, 심리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차원이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지방정부와 지역환경적 특성에서는 각각 1개의 변수가 유의하였고, 제도적 특성에서는 유의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 유의성 및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심리적 특성의 타인신뢰와 정착의지( $\beta = .528$ ) 요인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유연성( $\beta = .287$ ) 요인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특성의 외부활동의 참여수준( $\beta = .286$ ), 언어기술과 의사소통( $\beta = .173$ ) 요인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환경 특성의 자원봉사와 시민종교단체( $\beta = .150$ )와 지방정부 특성의 시설과 서비스 체계( $\beta = .135$ )도 비중 있는 요인이었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제수준( $\beta = .115$ ), 교육수준( $\beta = .107$ ), 거주기간( $\beta = .102$ )도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정부를 포함한 지역사회는 앞으로 이러한 8가지 의미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과 논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 가족의 적응을 위한 심리적 특성으로 타인신뢰와 정착의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유연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다문화 가족의 한국인(사람)에 대한 이해도, 신뢰도, 거주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가족의 적응이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한국문화의 이해도와 선호도,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수록 적응이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요인에서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타문화를 경험하며 심리적으로 잘 지내는 것으로, 주로 일상생활에서 유능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선호도, 수용성이 높으면 순종(submission), 타협(compromise), 일치(consensus)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사회적 적응은 훨씬 쉬워진다는 기존의 견해가 많은데(곽병선·김희숙 2000; 여중철, 2010; 송지현·이태영, 2010; 김희순·정희선, 2011), 실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둘째, 다문화 가족의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특성으로 언어기술과 의사소통 및 외부활동의 참여수준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다문화 가족 안팎의 평소 대화상황에서 어휘구사 수준이 높고 명확하며, 여기에 언어나 제스처의 기술성, 의사전달의 자신감이 더해질수록 생활에서의 적응이 잘 이루어짐을 뜻한다. 언어는 다문화 가족의 정체성 및 인권, 나아가 자녀양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은 지역사회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들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대한 외부활동의 통

계적 유의성에서는 정기적인 친목모임을 가지고 참여를 잘 하며, 여가 및 문화활동, 야외활동을 능동적으로 할수록 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문화 가족의 경우, 외부의 여가활동이나 문화생활을 통해서 타인의 사고와 타문화의 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경제수준, 교육수준, 거주기간은 각각 다문화 가족이 원래부터 가졌던 조건변수(condition variable) 및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의 성격으로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풍족한 생활을 할수록 현지에서의 적응력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교육수준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학습능력과 지식습득의 효율과 관련이 있어 학력이 지역사회의 적응속도와 연관이 높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해주고 있다. 거주기간과 적응도 유의한 비례관계임이 증명되었다. 물론 다문화 가족의 학력은 높다 하더라도 이주국가인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는 이른바 '숙련의 이전 장벽'이 존재해서 바로 취업이나 이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학력 전문직이 저학력 저숙련직 보다 상대적으로 이주사회 적응에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Levitt & Jaworsky, 2007; Nelson et. al, 2008; 공수연·양성은, 2011).

넷째, 환경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와 시민단체의 존재와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의 다문화 가족 지원시설과 서비스 체계의 요인도 다문화 가족의 적응에 경험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결과는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일선 지원시설의 규모나 숫자, 다문화지원서비스의 질(quality) 등이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방문과 지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 관련 시민종교단체 활동이 활발할수록 다문화 가족의 적응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짐을 뜻한다.

## V. 결론 및 시사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는 전례가 없을 만큼 매우 압축적이면서도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전되어 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전국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가족의 급격한 증가는 지역경제와 고용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일상과 문화,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모습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지역수준에서부터 다문화 가족의 속성과 적응 문제에 대한 이해가 건실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다문화 정책은 단지 단편적인 처방에 불과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



활적응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된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정부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며, 다문화에 대한 열린 의식이 지역사회 밑바닥에서부터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 대한 기존의 관심이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적응도와 정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지원과 실천적 도움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 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결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규모나 증가속도에 비해서 지역사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 측면에서 일정한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현황분석에서 검토된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문화 가족 숫자의 가파른 증가속도, 국적과 신분 및 체류목적의 다양화, 다문화 가족 자녀와 2세들의 상대적 증가 등이 있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지원, 인력과 예산, 지원단체 등의 역량은 현재 급격하게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울이나 광역시 지역과 같은 대도시들의 경우에도 인력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을 시사했다. 이에 앞으로 정부와 지역사회는 자기 주도적으로 기존의 소극적 관리일변도의 다문화 가족 지원책을 수정해야 하고, 향후 이들의 적응과 공생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둘째,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심리적 특성의 차원으로 타인신뢰와 정착의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유연성의 요인이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지역사회는 심리적으로 먼저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인식과 다문화 가족의 정착의지가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정부는 앞으로 다문화 가족이 사람과 문화의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개방(openness)과 관용(tolerance)을 갖추고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친화성(friendship)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여기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점은 교육과 지원의 대상이 다문화 가족에게 한정되기보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의 긍정성에 대한 지속적이며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양방향(two-way)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나라 지역사회인구의 95% 이상은 내국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열린 다문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대상의 비교문화이해프로그램과 함께 내국인의 다문화이해프로그램을 균형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건강한 다문화 가족을 더 많이 발굴하고 이를 수범사례로 홍보하여, 상호 동등한 신뢰와 문화적 이해도를 함께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sup>10)</sup>

10) 지역사회에서 상이한 문화들간의 교섭과 교차는 결코 평등(equality)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화교섭과 교차는 본질적으로 권력(power)적 성격과 차등성(inequality)을 가지고 있다(Fleras, 2009; Tsuneyoshi, Okano & Boocock, 2011). 주류사회의 전통, 관습, 문화에 기반을 둔 내국인

셋째,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특성차원에서는 언어기술과 의사소통 및 외부활동의 참여수준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즉 다문화 가족은 새로운 정착지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을 배우고 미묘한 문화적 기준과 새로운 가치방향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이 연구에서 증명하였다. 지금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필수서비스가 한국어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비영어권인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다문화 가족들은 대부분 영어를 집에서 조금만 사용하다 보니, 다른 나라 다문화 가족에 비해 한국어 습득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상담, 교육, 의료, 봉사서비스는 상시적 맞춤형이 아닌 일시적 집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다문화 언어와 의사소통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외부활동으로 인해 다문화 가족은 일방적 수혜자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체임이 지역사회에 지금보다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 가족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거주기간은 지역사회 적응에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조건이 되고 있었다. 다문화 가족의 정착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경제문제와 교육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서도 미래의 주요 현안이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다문화 가족의 경제문제와 교육문제의 유의미성으로 인해, 향후 우리는 다문화 가족의 빈곤과 부적응으로 인한 미래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사회취약계층에 위치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빈곤은 2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도 있고, 다문화 가족의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이혼, 사별, 별거 등에 따른 해체가족도 늘어 지원의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의 자활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의 자산형성 프로그램,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창업형 자립모델 등의 기회를 보다 확대시키되, 지역사회 차원에서 먼저 다문화 친화기업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수준의 일정한 정부 인센티브가 사업체에 제공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맞는 기초적인 요구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맞춤형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환경적으로 지역의 자원봉사와 시민단체의 존재와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의 다문화 가족 지원시설과 서비스 체계도 다문화 가족의 적응에 경험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선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자생적 민간단체(NGO, 종교단체)들은 지역의 다

---

다수집단의 정체성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문화 가족 소수집단의 정체성 사이의 불평등은 소수집단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배제(exclusion)의 문제만 심화시킬 가능성을 키운다.

양한 가용자원을 활용하고, 시민거버넌스(civic governance)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이에 다문화 가족의 증가속도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시민사회와 민간단체의 지원역량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의 교육종사자,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의사, 간호사 및 의료직 전문가, 조리사, 이·미용사, 기타 생활서비스 업종의 다양한 전문인력은 훌륭한 인적자원이므로, 이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의 다문화 가족 서비스는 복지관, 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를 위시한 어머니회, 청년회, 여타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와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사업도 이들과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한다.<sup>11)</sup>

끝으로 다문화 가족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 호주, 유럽의 각 지역과 일본 등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지역사회(동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의 큰 틀은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을 통해 진행되는 풀뿌리 로컬거버넌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즉 현재 우리에게 도래한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그들을 중심으로 생활주변 이해관계자를 서로 관련시켜 총체적으로 파악해보지 않는다면 타당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는 이 연구가 표방하는 거시적, 양적 접근보다 오히려 미시적, 질적 접근이 더욱 적실할 수도 있다. 향후에는 참여관찰과 구술사 등의 인류학적 접근방법의 병행을 통해 이 연구가 탐색적으로 제안한 지역사회 적응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11)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지원과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약 210여 곳이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지역사회가 수행해야 할 다문화 가족 지원의 기능은 장기간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나마 여러 부처에 다원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의 수행이 어려웠고 지금도 역시 그러한 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족 및 가구 단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책네트워크를 종합,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국가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여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이용환경의 불평등이나 자원배분의 불균형 심화를 방지할 대책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공수연·양성은. (2011).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101-117.
- 곽병선·김희숙. (2000).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방안 고찰: 전북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8(2): 1-22.
- 김진숙·이혁구·이근무. (2010). 다문화 가정 부부의 결혼적응 연구: 근거이론 방법론 접근. 『한국가족복지학』, 30: 135-166.
- 김태원. (2013). 베트남 결혼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정과 가치갈등. 『다문화와 인간』, 2(1): 53-76.
- 김형수. (2011).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동북아연구』, 26(2): 267-288.
- 김희순·정희선. (2011).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 안산시 원곡동 '리트머스'의 사례. 『국토지리학회지』, 45(1): 93-106.
- 박진경. (20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9(3): 259-289.
- 박진경·원숙연. (2010).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 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191-217.
- 안미정·우양호. (2015). 한국화교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성찰. 『한국민족문화』, 56: 383-416.
- 여중철. (2010). 다문화 가족의 형성과 문화적 적응. 『민족문화논총』, 44: 351-388.
- 우양호. (2012). 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의 내향적 국제화 수준과 그 영향요인: 거주외국인과의 접촉과 화합을 위한 과제. 『지방행정연구』, 26(1): 193-222.
- 우양호. (2013). 지역사회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해항도시 부산의 다문화거버넌스 구축 사례. 『지방정부연구』, 17(1): 393-418.
- 우양호·이정석. (2010).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7(1): 393-418.
- 우양호·안미정. (2015).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기억: 이민자 공생의 새로운 해법 찾기를 위한 학제적 접근. 『지방정부연구』, 19(2): 401-423.
- 이로미·장서영. (2010). 다문화 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 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1): 179-208.
- 이종열·범령령. (2010). 한국 다문화 관련 행정서비스의 대응성에 관한 연구: 중국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3): 225-247.
- 성향숙. (2011).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2): 307-316.

- 송지현·이태영. (2010). 다문화 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164-192.
- 이학식·임지훈. (2013). 『SPSS20.0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장진경·신유경. (2012). 다문화 부부간 개인적 특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발표논문집』: 360-365.
- 장진경·전종미·신유경. (2008).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 가족의 적응성 저해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발표논문집』: 47-63.
- 장한나·윤기찬(2010).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행정연구』, 24(2): 121-155.
- 정명주. (2010). 정책수단 분석을 통해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275-295.
- 정명주. (201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 실태 분석: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1: 87-135.
- 한국행정학회. (2009).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우리사회의 대응: 다문화 가족 부부 및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논문집』, 1-20.
- 한승미. (2010). 국제화 시대의 국가, 지방자치체 그리고 “이민족시민(ethnic citizen)”: 동경도(東京都)정부의 ‘다문화주의’ 실험과 재일 한국/조선인에의 함의. 『한국문화인류학』, 43(1): 263-305.
- 현경자·김연수.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측정도구 개발연구. 『보건사회연구』, 31(4): 63-100.
- 홍성희. (2012). 다문화 가족의 문화차이 인식과 문화적응의 양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153-172
- 법무부. (201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8442호). 다문화 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대한민국 체류외국인 통계(2005-2015).
- 여성가족부. (2015).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2012년, 2015년) 보고서 및 보도자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5). 거주외국인정책(<http://www.gaok.or.kr>).
- 행정자치부. (2015a).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업무추진지침>.
- 행정자치부. (2015b). 외국인주민 지역별 통계 및 외국인주민 현황조사(2006년부터 각 연도).
- 행정자치부. (2015c). 지방자치단체 예산통계 및 국비지원 현황.
- Beiner, R. (2006).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A critical response to Iris Marion Young.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8(1): 25-37.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Padilla, A.(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New Findings*. Boulder, CO: Westview Press: 9-25.

-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 57(3): 625-631.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Handbook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3. edited by Berry, Segall and Kagitcibasi, Allyn & Bacon: 291-326.
- Castles, S. and Miller, M. J.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Third Edition)*. New York and London: The Guilford Press: 1-154.
- Dunn, K., Thompson, S., Hanna, B., Murphy, P. and Burnley, I. (2001). Multicultural Policy within Local Government in Australia. *Urban Studies*. 38(13): 2477-2494.
- Dworkin, A. G. and Dworkin, R. J. (1999). *The Minority Report: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nic, and Gender Relations*.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87.
- Fleras, A. (2009).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Governance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lgrave Macmillan: 1-288.
- Good, K. R. (2009). *Municipalities and Multiculturalism: The Politics of Immigration in Toronto and Vancouver*.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45.
- Goonewarddena, K. and Kipfer, S. (2005). Spaces of Difference: Reflections from Toronto on Multiculturalism. Bourgeois Urbanism and the Possibility of Radical Urban Poli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3): 670-678.
- Haklai, O. (2009). State Mutability and Ethnic Civil Society: The Palestinian Arab Minority in Israel. *Ethnic and Racial Studies*. 32(5): 864-882.
- Hall, P. M. (1997). *Race, Ethnicity and Multiculturalism: Policy and Practice*. Garland Publishers, New York: Vincent: 89-114.
- Ipsen, D. (2005). The Socio-spatial Conditions of the Open City: A Theoretical Sketch.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3): 644-653.
- Johnson, K. R. and Bill Ong Hing. (2005). National Identity in a Multicultural Nation: The Challenge of Immigration Law and Immigrants. *Michigan Law Review*. 103(6): 1347-1390.
- Kelly, P. (2002). *Multiculturalism Reconsidered: Culture and Equality and its Critics*. New York: Cambridge Polity Press: 21-47.
- Kelly, C. and Meyers, J. (1995). *The Cross-Cultural Adaptability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

- Kivisto, P. (2002). *Multiculturalism in a Global Society*. Blackwell Publishing: 1-83.
- Kymlicka, W. and Norman, W. (2000). *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244.
- Levitt, P. and Jaworsky, B. N. (2007). Transnational Migration Studies: Past Developments and Future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1): 129-156.
- McGoldrick, D. (2005). *Multiculturalism and its Discontents*. *Human Rights Law Review*. 5(1): 27-56.
- Ryder, A. G., Alden, L. E. and Paulhus, D. L. (2000). Is Acculturation Unidimensional of Bidimensional?: A Head-to-Head Comparison in the Prediction of Personality, self-ident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 49-65.
- Nelson, H. Graburn, H., Ertl, J. and Tierney, R. K. (2008). *Multiculturalism in the New Japan: Crossing the Boundaries Within*. London and New York: Berghahn Press: 1-250.
- Tsuneyoshi, R, Okano, K. H. and Boocock, S. (2011). *Minorities and Multiculturalism in Japanese Education: An Interactive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1-26.

**우양호(禹良昊)**: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논문: 공공서비스 관리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연구, 2009)하고,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HK)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공공행정학회 총무이사, 한국지방정부학회 총무이사 등을 했고,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총무위원장, 대한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 및 지방행정, 해양행정, 정책분석 및 평가, 글로벌 지역연구, 다문화 공생 및 학제적 연구 등이다(E-mail: woo8425@hanmail.net).

**안미정(安美貞)**: 한양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논문: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2007)하고,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HK)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제주학회 편집위원,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류학적 관점의 해양문화, 동아시아 이주와 이민자, 생애사 연구 등이다.(E-mail: gasirian@hanmail.net).

